

# 이슈브리프



- 미리 가보는 2030년 한국 가족의 미래

김영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과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최숙희 | 한양사이버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

- 여성농업인의 역할변화와 정책 과제

강혜정 |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부교수

# 미리 가보는 2030년 한국 가족의 미래<sup>1)</sup>

김 영 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2년 수행된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Ⅱ)” 연구는 2030년 한국 가족의 미래 모습을 예측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는 전문연구진에 의해 인구, 정치, 경제 및 노동, 과학기술, 가족의식 및 가치관 영역에서 미래가족변화 가설 도출과 델파이조사로 미래 가족의 변동에 핵심추동력으로 작용한 요인발굴을 통해 미래가족변화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가족변동의 시나리오 축을 설정하고, 가족미래시나리오를 개발하였으며, 각 시나리오에 대한 일반국민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 1. 2030년 가족미래시나리오의 3가지 축: 돌봄, 불평등, 가족가치

‘돌봄(Care)’은 가족의 돌봄부담 증가 및 감소에 초점을 두었다. 고령노동의 장기화는 가족의 돌봄부담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고령인구 및 저출산 증가와 양극화 심화 등은 가족의 돌봄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연결되었다. 여성경제활동증가 및 유비쿼터스 스마트홈 확산은 돌봄부담의 증가 및 감소 두 방향 모두 연결되었다.

‘불평등(Inequality)’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증가 또는 감소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가설 중에서 양극화 심화는 불평등 증가와 연결되고 있었으며, 고령노동의 장기화는 불평등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연결됨이 제시되었다.

‘가족가치(Family value)’는 개인중심가치 강화와 약화 방향이다. ‘가족가치’는 EU나 OECD의 가족 시나리오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축으로, 한국의

1)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Ⅱ)(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외, 2012 발간예정)」의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임

가족미래 전망에서는 중요하게 부각되어 한국적인 특성을 보여주었다. 개인중심 가치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전체 가설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결혼의 제도적 지위는 약해지고, 둘 이상이 함께 사는 가족보다는 독신가구가 증가하며, 집합으로서의 가족구성원보다는 개인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개인화 경향의 확산과 연결되는 것을 시사한다.

돌봄, 불평등, 가족가치 세 가지 축에 대하여 증가 및 감소(강화 및 약화) 등의 두 가지 값과 조합하여 최종 5가지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 2. 2030년 가족미래시나리오 5종

가. 시나리오1: 개인가치와 가족생활 경합 시나리오  
‘개인가치와 가족생활경합 시나리오’는 불평등이 증가하고, 가족돌봄부담도 증가하며, 개인중심가치는 강화되는 시나리오이다. 즉 계층간 소득 및 생활수준의 차이가 크며, 국가에서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가족의 공동체적 관심보다 개인의 생활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사회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가족돌봄이 높은 부담과 가치관의 개인화 간의 경합 또는 충돌이 예상된다.

〈시나리오 1〉 개인가치와 가족생활 경합 시나리오

요소		설명	예시
경제적 불평등	불평등수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 근무형태 등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가 큼</li> <li>• 소득수준에 따라 전반적인 생활수준에도 격차가 크게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차이가 큼</li> </ul>
돌봄 방식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시장에 돌봄서비스가 없거나 낮은 수준으로만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가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불충분하여 가족이 직접 아동을 돌봐야 함</li> <li>• 국가가 제공하는 노인돌봄시설이 불충분하여 가족이 주로 노부모를 간병하고 수발해야 함</li> </ul>
가족 의식	개인중심가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과 함께하는 것만큼 개인의 생활(여가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li> <li>• 가족구성원은 상호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함</li> <li>• 가족의 관심보다 개인의 관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자의 경우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지 않음</li> </ul>

### 나. 시나리오(2) 가족생활의 양극화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는 경제적 불평등은 증가하지만 시장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 부분적으로 가족돌봄부담이 감소하며, 개인중심가치는 강화되는 시나리오이다. 즉 계층간 소득 및 생활수준의 차이가 크며, 돌봄은 국가

서비스는 충분하지 않고 시장화되어 계층별 서비스격차가 크게 차이이며, 가족의 공동체적 관심보다 개인의 생활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사회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특히 불평등의 증가 측면이 부각된다.

〈시나리오 2〉 가족생활의 양극화시나리오

요소		설명	예시
경제적 불평등	불평등수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 근무형태 등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가 큼</li> <li>• 소득수준에 따라 전반적인 생활수준에도 격차가 크게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차이가 큼</li> </ul>
돌봄 방식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종류 및 가격대의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이 형성됨</li> <li>• 국가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민간 서비스 제공업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온전히 가족이 부담하며, 따라서 제공받는 돌봄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서비스는 시장에서 상품화된 형태로 제공됨</li> <li>• 높은 가격부터 낮은 가격까지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가 존재하여 경제적 형편에 따라 서비스를 '구매' 할 수 있음</li> </ul>
가족 의식	개인중심가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과 함께하는 것만큼 개인의 생활(여가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li> <li>• 가족구성원은 상호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함</li> <li>• 가족의 관심보다 개인의 관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자의 경우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지 않음</li> </ul>

다. 시나리오3 :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시나리오  
최선의 시나리오로서 예측되는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시나리오'는 경제적 불평등과 가족돌봄부담이 감소하며, 개인중심가치는 강화되는 시나리오이다. 즉 계층간 소득 및 생활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고,

돌봄은 국가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며, 가족의 공동체적 관심보다 개인의 생활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사회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가족구성원들은 서로간의 부담이 적고, 이로 인해 오히려 친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시나리오 3〉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시나리오

요소		설명	예시
경제적 불평등	불평등수준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이 안정되고, 일자리간 임금격차가 줄어들</li> <li>• 주거에 대한 국가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음</li> <li>• 소득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다양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생활 관련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무상 또는 낮은 비용으로 제공되어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격차가 적게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완화됨</li> <li>• 장기저리임대아파트 공급의 확대로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li> </ul>
돌봄 방식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 아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됨</li> <li>• 노인 대상 국가가 지원하는 무상 또는 저렴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 아동, 노인에 대해 국가에서 돌봄 서비스 지원</li> <li>• 국가지원 돌봄서비스는 무상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됨</li> </ul>

요소		설명	예시
가족 의식	개인중심가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과 함께하는 것만큼 개인의 생활(여가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li> <li>• 가족구성원은 상호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함</li> <li>• 가족의 관심보다 개인의 관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자의 경우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지 않음</li> </ul>

라. 시나리오4 : 평등사회-불평등가족 공존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는 경제적 불평등과 가족돌봄부담이 감소하지만, 개인중심가치는 약화되는 시나리오이다. 즉 계층간 소득 및 생활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고, 돌봄은 어느 정도 국가서비스를 통해 제공되지만, 가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의 가사·돌봄역할수행에 대한 기대는 온존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이다. 이 시나리오는 가족간 불평등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가족 내의 성별 불평등은 더욱 커질 위험을 가지고 있다.

#### 〈시나리오 4〉 평등사회-불평등가족 공존 시나리오

요소		설명	예시
경제적 불평등	불평등수준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이 안정되고, 일자리간 임금격차가 줄어들</li> <li>• 주거에 대한 국가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음</li> <li>• 소득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다양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생활 관련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무상 또는 낮은 비용으로 제공되어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격차가 적게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완화됨</li> <li>• 장기저리임대아파트 공급의 확대로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li> </ul>
돌봄 방식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 아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됨</li> <li>• 노인 대상 국가가 지원하는 무상 또는 저렴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 아동, 노인에 대해 국가에서 돌봄서비스 지원</li> <li>• 국가지원 돌봄서비스는 무상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됨</li> </ul>
가족 의식	개인중심가치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전체를 위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양보하거나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함</li> <li>• 가족 전체가 동의하는 일이라면 구성원 중 한 명이 강하게 반대하더라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함</li> <li>• 사회보다 가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행사와 개인의 일이 겹칠 경우 가족행사를 우선할 것을 요구함</li> <li>•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li> </ul>

## 이슈브리프

### 마. 시나리오5 : 가족부담 극대화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으로 예측되는 ‘가족부담 극대화 시나리오’는 경제적 불평등과 가족돌봄부담이 증가하며, 개인중심가치는 약화되는 시나리오이다. 즉 계층간 소득 및 생활수준의 차이가 크며, 가족의

돌봄부담은 크게 남아있을 뿐 아니라, 가족주의 가치도 개인화되지 않은 사회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책임이 개별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고 계층간, 성별 불평등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시나리오 5〉 가족부담 극대화 시나리오

요소		설명	예시
경제적 불평등	불평등수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 근무형태 등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가 큼</li> <li>소득수준에 따라 전반적인 생활수준에도 격차가 크게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차이가 큼</li> </ul>
돌봄 방식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및 시장에 돌봄서비스가 없거나 낮은 수준으로만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가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불충분하여 가족이 직접 아동을 돌봐야 함</li> <li>국가가 제공하는 노인돌봄시설이 불충분하여 가족이 주로 노부모를 간병하고 수발해야 함</li> </ul>
가족 의식	개인중심가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 전체를 위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양보하거나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함</li> <li>가족 전체가 동의하는 일이라면 구성원 중 한 명이 강하게 반대하더라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함</li> <li>사회보다 가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행사와 개인의 일이 겹칠 경우 가족행사를 우선할 것을 요구함</li> <li>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li> </ul>

### 3. 2030년 가족미래시나리오에 대한 일반국민 선호도

일반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선정된 5가지 가족미래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미래가족모습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일반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시나리오’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선호한 것은 ‘평등사회-불평등가족 공존시나리오’ (32.0%)이다. 두 시나리오는 경제적 불평등 감소, 가족의 돌봄부담 감소는 동일하지만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시나리오’는 개인중심 가치가 강화되는 가족을, 평등사회-불평등가족 공존시나리오는 개인중심가치가 약화되는 가족을 전망한데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가족가치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시나리오가 경제상황과 가족돌봄부담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전망에 기초하고 있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거부하는 시나리오는 ‘가족부담극대화시나리오’ (41.9%)였으며 다음으로 ‘개인가치와 가족생활경합시나리오’ (29.5%)였다. 두 시나리오는 돌봄의 가족부담은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공통



점을 가지지만 가족부담극대화 시나리오는 개인중심 가치가 강화되는 가족을, 개인가치와 가족생활경합시나리오는 개인중심가치가 약화되는 가족을 전망하고 있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경제상황과 가족돌봄부담의 부정적 전망이 거부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4. 2030년 가족미래시나리오 내러티브 :

#####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시나리오’와 ‘가족부담극대화 시나리오’ 중심으로

김미래 씨는 마트의 쇼핑도우미로 일하는 파트타임이다.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각종 상여금제도와 휴가제도, 직원할인혜택 등을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게 제공받고 있어 근무환경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

미래 씨의 여동생 영래 씨는 PC업체 기획개발부과장으로 아직 미혼이다. 현재 영래 씨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어 별다른 결혼계획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언니 미래 씨의 단란한 가정생활을 지켜보며 일과 결혼생활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충분히 자리매김 했음을 느끼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게다가 부하직원 최소영 씨는 이혼 후 어린 딸의 양육을 도맡고 있는 가장이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최고급 국립보육시설과 국가 한부모가족 지원금 덕분에 육아/가계부담 없이 회사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미래 씨의 모친 양여분 씨는 국립 노인요양시설에서 재할 중인데, 이곳은 24시간 사람의 시선으로

사용의도를 파악하고 기기를 제어하는 비접촉 맞춤형 UI가 설치된 최신식 시스템을 자랑한다. 덕분에 보호자의 보조수발은 거의 필요치 않으며 여분 씨는 편리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 나날이 쾌차하고 있다.

또한 미래 씨의 시부모인 장태평 씨와 박선주 씨는 서울 외곽의 공립 노인시설에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다. 노인여가를 위한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축된 이곳은 국립 의료종합센터와 연계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수시로 입주민의 건강을 체크해준다(2030가족미래 시나리오 중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시나리오’)

김미래 씨는 마트의 쇼핑도우미로 일하는 파트타임이다. 비정규직인 미래 씨는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문제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첫째 딸 초롱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미래 씨의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됐다. 최근 초등교육은 이-러닝용 소셜 네트워크가 활성화됨에 따라 자택 학습의 비율이 대폭 늘어났다. 보호자가 미숙한 자녀의 학습보조를 지원해 줘야 하는 시스템인 까닭에, 미래 씨는 초롱의 수업일정에 맞춰 매번 회사의 눈치를 보며 어렵게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있다.

한편 미래 씨의 모친 양여분 씨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구식주택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퇴행성 관절염을 앓던 여분 씨는 최근 지병악화로 지능형 근력지원 장치 삽입수술을 받아야만 하지만 이는 국가 의료보험이 미적용 되는 수술이다. 이 때문에 보호자인 두 딸, 미래 씨와 여동생 영래 씨는 수술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며 수술후의 재활치료 보조 등 각종 돌봄 역시 두 딸이 짊어져야 한다. PC업체 기획개발부 과장인 미래씨의 동생 영래 씨는 얼마 전 결혼을 전제로 만나온 연인으로부터 청혼을 받고 상당한 고민에 휩싸였다. 부하직원인 최소영 씨의 경우, 이혼 후 어린 딸 민지의 육아를 전적으로 도맡고 있는데 일과 양육, 어느 쪽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매일 아침 사설 놀이방에다 우는 아이를 간신히 떼어놓고 출근하는 소영 씨는 온종일 신경이 그쪽에 쏠려 있어 업무에 매진하지 못한다. 또한 야근이라도 생기는 날엔 놀이방 하원 후 딸의 육아를 부탁할 사람을 찾느라 다른 동료직원에게까지 민폐를 끼친다. 이러한 소영씨의 모습은 결혼생활의 큰 부담으로 다가와, 영래 씨는 청혼에 대한 대답을 자꾸만 보류하게 된다 (2030가족미래 시나리오 중 ‘가족부담 극대화 시나리오’)

위의 내러티브에서 나타나듯이 일반인들이 2030 한국 가족의 미래 모습으로 가장 기피하는 ‘가족생활 부담 시나리오’는 지금보다 퇴보하는 가족모델임을 알 수 있다. 즉, 직업·근무형태별 소득수준의 차이가 크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생활 격차도 크다. 국가가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불충분해 가족이 직접 아동, 노인을 돌봐야 한다. 개인이나 사회보다 가족을 우선 가치로 삼아 가족을 위해선 희생하고 양보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하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2030 가족의 모습은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시나리오’와 같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불평등은 줄어들고, 가족

의 돌봄부담도 완화되면서 가족안에서 개인 구성원이 존중되는 그러한 가족일 때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5. 2030년 미래가족시나리오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일반국민들이 가장 희구하는 가족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평등 감소를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정비 가 요구될 것이다. 사회보험의 커버리지 확대, 보편적 수당의 도입, 공공부조의 확충 등 다차원적인 사회안 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전반적 과제로 제안될 수 있으며, 여성·가족정책의 차원에서는 특히 빈곤에 취약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안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돌봄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는 가족 돌봄, 노인부양 부담의 사회적 책임 확대 등 세부적인 정책과제의 추진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일과 가족돌봄의 책임을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의 전환도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던 미래 가족 변화의 또 다른 축은 개인중심적 가족 의식의 강화인데 향후 여성·가족정책 수립 시 개인 중심적 가족의식의 확산 및 다양한 가족의 출현 등의 변화요인은 단순히 정책대상을 결정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를 다층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과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최 숙 희

한양사이버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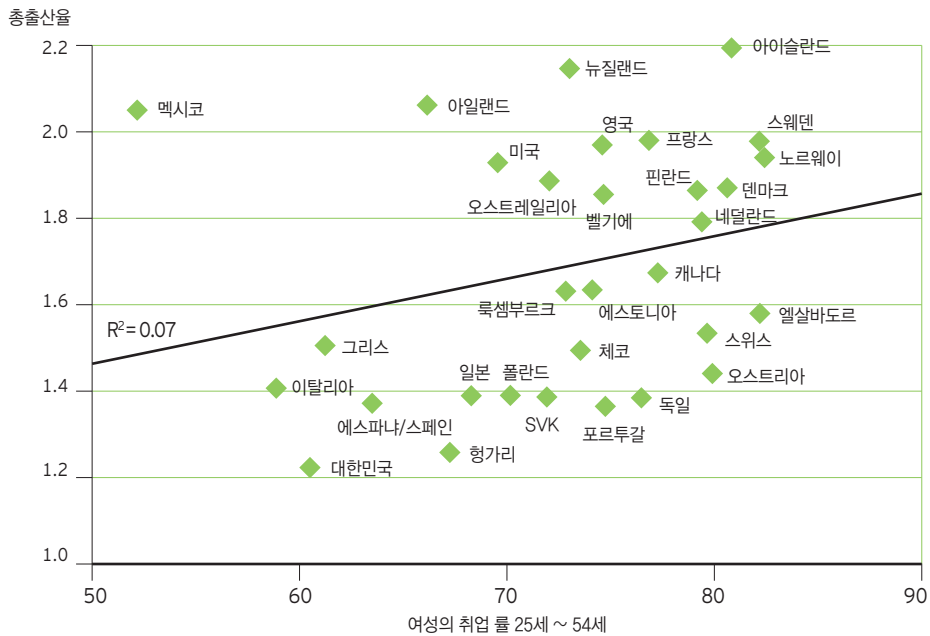
## 1.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

한국은 2011년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1.3명 이하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전체 여성 고용률은 53.1% 수준으로 OECD 평균수준인 56.7%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여성의 경제참여도 낮고, 출산율도 낮은 2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게다가 남녀 간 및 자녀유무에 따른 여성간 임금수준도 큰 차이를 보여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기회와 임금수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5-54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합계출산율과 고용률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OECD 자료(2010년)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은 1.23명의 합계출산율과 60.3%의 고용률을 보인 반면, 네덜란드, 벨기에,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프랑스 등은 높은 합계출산율과 동시에 80% 내외의 고용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1.39명의 합계출산율과 68.2%의 고용률 수준이다. 반면, 스웨덴은 1.98명의 합계출산율과 82.0%의 고용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출산율이 계속 내려가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결혼보다는 독신을 선택하는 가임기 여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은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없는 환경은 일본 사회에 전통으로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뚜렷한 남녀 역할의 구분에 기인한다.

## 이슈브리프



자료 : OECD (2011), OECD Family Database

〈그림 1〉 2010년 국가별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

〈표 1〉 2010년 국가별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

국가명	고용률	합계출산율	국가명	고용률	합계출산율
한국	60.3	1.23	네덜란드	79.3	1.80
헝가리	67.1	1.26	벨기에	74.4	1.87
포르투갈	74.6	1.37	핀란드	79.1	1.87
폴란드	71.7	1.38	덴마크	80.6	1.88
스페인	63.2	1.38	호주	71.9	1.89
독일	76.3	1.39	미국	69.3	1.93
일본	68.2	1.39	노르웨이	82.2	1.95
이탈리아	58.7	1.41	스웨덴	82.0	1.98
체코	73.4	1.49	영국	74.4	1.98
그리스	61.1	1.51	프랑스	76.7	1.99
캐나다	77.2	1.67	아일랜드	66.0	2.07

자료 : OECD (2011), OECD Family Database

d'Addio와 d'Ercole(2005)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은 여성 고용 신장과 출산을 제고라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주요 과제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여성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가 잘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출산이 왕성한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스웨덴의 출산을 제고정책을 분석한 많은 연구는 전반적으로 아동수당이나 세제 지원에 비해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보육과 휴직)이 효과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정책이 '평생 노동시장 참여 지원'이라는 사회의 전반적인 태도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sup>1)</sup>.

프랑스는 1인당 1.99명(2010년)의 출산율로 EU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Letablier(2003)는 출산장려 지원금을 가정에 직접 지급하는 정책보다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이 프랑스의 출산율 제고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 결국 프랑스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특정 정책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성공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여성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가 잘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출산이 왕성한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EU의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50% 정도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친가족적 근로 환경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근로자의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공 부문일수록 잘 조성되어 있다. 적어도 OECD 20 개국에서는 현재 출산 및 육아휴직 총기간이 1년 혹은

그 이상이다<sup>2)</sup>. 고용이 보장되는 출산휴가는 여성의 고용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가 출산율도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sup>3)</sup>. 유럽 국가들은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 모두 한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고용률이 80.0% 이상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출산율 1.6명 이상의 중상위권에 분포해 있다.

국제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3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정책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국가일수록 상대적으로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높다. 둘째, 고용과 자녀양육은 대체관계에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최근에는 직장과 가사 양립을 위한 사회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이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기여는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가족을 위한 다양한 휴가, 탄력근무제, 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무제 등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 절대적인 탄력적인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sup>4)</sup>.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양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며, 이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사 및 육아 등 가정 일은 여자가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는 공통적으로 출산율이 낮다. 그 결과, 2005년 시행된 일본의 '新新엔젤플랜'은 양성평등을 주요과제로 설정하였다. 반면, 프랑스, 덴마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 여부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다. 1970년대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스웨덴, 핀란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주요국 저출산 대책 동향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회의, 2005. 12. 15~16.

2)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3) 한국노동연구원, 통계프리즈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가 출산율도 높다", 노동리뷰 2005. 4(통권 제4호), 2005. 4. 6.

4)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 이슈브리프

드,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미국, 캐나다 등은 출산율을 회복하였고,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등은 출산율이 하락하였다.

결국 저출산 극복 여부를 결정짓는 두 가지 요인으로, 하나는 사회·문화적으로 양성평등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가의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및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느냐 여부라고 할 수 있다.

## 2.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조성과 기업의 역할

최근 OECD가 발표한 임금격차 보고서에 따르면<sup>5)</sup>, 한국에서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은 남성임금의 87.2%로 12.8%p 적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이가 있는 여성은 남성임금의 54.2%로 45.8%p 적은 임금을 받아 자녀 유무에 따른 여성임금 격차가 33.0%p인 것으로 나타나,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격차를 보였다. 즉, 아이를 낳은 한국의 직장여성은 직장남성은 물론이고 아이가 없는 직장 여성과 비교해도 임금이 낮은 수준이고, OECD 평균과 비교해도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2년에 25~44세인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 스페인 2.1%p, 벨기에 3.3%p 등은 자녀유무에 따른 여성간 격차가 크지 않은 수준이었고, 한국 다음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임금 격차가 큰 나라로는 아일랜드 31.4%p, 룩셈부르크 24.5%p, 캐나다 22.6%p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한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그 격차가 37%p로 나타나 OECD회원국 중 제일 큰 격차를 기록하였다.

〈표 2〉 자녀 유무에 따른 남성과의 임금격차

(단위 : %, %p)

국가명	자녀 있는 여성	자녀 없는 여성	여성간 격차
일본	61	24	37
한국	46	13	33
캐나다	29	7	22
미국	23	7	16
네덜란드	6	-2	8
OECD 평균	22	7	15

자료 : OECD, Closing the gender gap : Act now, 2012.12.17

자녀 유무에 따라 여성의 임금 차이가 큰 이유는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려운 직장환경에 기인한다. 이러한 환경요인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져오고, 재취업시 더 낮은 조건으로 취업하는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OECD는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남녀 모두에게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sup>6)</sup>.

기업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 정책이 무엇이든 간에 여성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은 직장에서

5) OECD, Closing the gender gap : Act now, 2012.12.17

6) 동아일보, "직장여성 자녀유무 따라 임금 33%p差", 2012.12.19.

조성되기 때문이다. 만약 기업이 비협조적으로 대응한다면,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고, 쉽게 대체가 가능한 고용자의 경우에는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하기 쉽다<sup>7)</sup>. 가족 친화적인 근무 여건은 근무의 공백을 줄이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이직률을 낮추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8)</sup>.

### 3. 스웨덴 일·가정 양립정책 사례

스웨덴의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4대 정책에는 단시간근로(Part-time work), 공보육(publicly financed childcare), 가사 서비스에 대한 세금공제(tax-deduction for domestic services)와 부모휴가(parental leave) 등이 있다<sup>9)</sup>. 스웨덴은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가족 모형(dual-earner/dual-carer family model)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성평등의 문제는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남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엄마의 고용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돌봄 책임을 지원하고 있다. 위의 4가지 정책은 엄마의 역할과 가사 일에 대한 여성의 책임에 맞추어 고용수요를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스웨덴은 성평등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용시장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에서 여성과 남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사회구조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정책 중에서 가

사 서비스에 대한 세금공제는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다. 가사 서비스에 대한 세금공제는 2007년에 도입되었다. 스웨덴에서 가사 서비스에 대한 세금공제가 도입된 배경은 무보수의 가사 일에 대한 여성의 책임은 고용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하지 않은 직위를 만들어 내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사 서비스에 대한 세금공제를 통해 여성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비공식적인 일을 공식적인 일로 전환하여, 성평등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부모휴가도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중요 정책이다. 여성위주의 육아휴직에서 남성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모휴직 제도로 변화하고 있다. 스웨덴은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된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남성 육아휴직에 관해 가장 선진적 모델로 꼽히는 나라로, 1974년 남성육아휴직 제도를 처음 실시하였다. 스웨덴정부는 남성육아휴직 제도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크게 늘지 않자, 육아휴직의 남성할당제를 실시하였다. 스웨덴에서 아버지의 달(A father's month) 1개월은 1995년에 도입되었고, 법 개정을 통해 2002년 2개월로 확대되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약 215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스웨덴은 소득이 보장된 390일의 모성휴가(8세 이하 자녀)가 있으나, 적어도 60일은 아버지가 사용할 것을 2002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정책은 부성휴가의 보편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85%의 아버지가 부성휴가를 사용하고 있다<sup>10)</sup>. 1999년에는 평균적으로 부성휴가로 57일을 사용하였으나, 2002년 법 개정 이후에는 평균 84일로 늘어났다. 남성이 반드시 부

7) Kiser, S. J., "Friendly to Whose Families? A Case Study of the Delivery of Work-Family Benefits in a Model Firm",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draft of 22 November, mimeo, 1996.

8) Dex, S. and Scheibl, F., "Business Performance and Family-Friendly Policies", Journal of General Management, Vol. 24(4), Summer 1999.

9) Anita Nyberg,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in Sweden, KWEA 2012 International Conference, 2012, 5, 25.

10) "In Sweden, Men Can Have It All", NYT, 2010.6.9.

성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성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득이 보장된 1개월의 휴가가 축소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부성휴가기간 동안 80%의 소득이 보장되고, 상한액은 3,300달러(1개월, 약 370만원)이다.

스웨덴 여성의 취업 형태를 살펴보면<sup>11)</sup> 전일제 고용이 50.0%, 시간단축형 고용이 35.1%에 이를 만큼 파트타임 근무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전일제 고용이 79.0%에 달한다. 근로시간도 여성의 경우 35~40시간이 51.0%로 가장 많지만, 20~34시간도 36.3%나 된다. 결국 스웨덴은 여성의 고용률이 80.0% 이상이지만, 그만큼 시간단축형 근로 형태도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4.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현재 한국은 母와 父 모두 1년간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허용 범위가 넓은 편이지만,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어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2009년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1.41%에 불과하다. 스웨덴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은 20.8%(2007년 기준)이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모 모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부모휴가로 전환하여 일정기간 남성이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EU국가들을 중심으로 각국들은 모성휴가/육아휴가 정책을 보완하여 부모휴가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부모의 권리를 강조하고, 평등한 부모역할(equal parenthood)을 기반으로 하여 육아 등의 가족에 대한 책임과 직장에서의 책임이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부모가 함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종래의 육아휴가 대신에 부모휴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종래의 모성휴가제도나 육아휴가제도의 개념 대신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부모휴가의 개념으로 사용되거나 변경되는 추세이다. 독일도 2007년부터 스웨덴 모델로 전향하였다. 14개월의 유급휴가 중에서 2개월을 아버지를 위해 마련해 두었다. 2년 만에 아버지의 부모휴가 사용률은 3%에서 2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스웨덴의 육아휴직활성화 정책은 맞벌이 부부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서,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하고, 가사노동의 남녀 균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1993년의 2%와는 대조적인 결과로 41%(2006년)의 기업이 공식적으로 부성휴가를 권장할 정도로 기업의 인식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웨덴 노동시장정책평가연구원(Swedish Institute of Labor Market Policy Evaluation, 2010.3)의 분석에 따르면, 남성이 사용하는 휴가 1개월당 여성의 미래소득이 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남성은 자녀의 삶에 더 투자할 수 있고, 부모의 역할에 더 참여할 수 있고,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남성육아휴직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시키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우대제도를 강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 평가시 남성육아휴직

11) 일본 내각부가 일본과의 비교를 위해 2003년 12월 전화를 통해 스웨덴 성인남녀 각각 300명씩 총 6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비용을 반영하거나 가점을 주거나,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인증기준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것 등이 있다.

일본 히로시마현에서는 남성육아참가촉진급부금(男性育兒参加促進給付金)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1세기직업재단 지방사무소 소장이 지정하고, 남성의 육아참가촉진사업 실시 사업주로 지정되면 21세기직업재단으로부터 1년마다 50만엔을 2년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영국은 2000년부터 ‘일·가족 도전 기금(Work-Life Challenge Fund)’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전략들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일·가족 도전기금(Work-Life Challenge Fund)’을 통해 기업들에게 가족친화적 작업장 도입의 장점을 홍보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들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기금은 일·가족 양립이 가져오는 혜택을 사용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결성된 일·가족 균형을 위한 사용자 연합(Employers for Work-Life Balance)과 정부

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다. 2000~2003년까지 이 도전기금은 400개 이상의 공공 및 민간 기업에 이러한 일·가족 균형조치들을 개발할 수 있는 인적자본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도록 1,100만 파운드를 지원했다. 또한 2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다.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을 동시에 제고하면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가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하고, 이제는 남성육아휴직 활성화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모 모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부모휴가로 전환하여 일정기간 남성이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남성육아휴직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 동아일보, “직장여성 자녀유무 따라 임금 33%p差”, 2012.12.19.
- 최숙희·김정우,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6. 9.
- 한국노동연구원, 통계프리즘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가 출산율도 높다”, 노동리뷰 2005년 4월호(통권 제4호), 2005. 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주요국 저출산 대책 동향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회의, 2005. 12. 15~16.
- Anita Nyberg,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in Sweden, KWEA 2012 International Conference, 2012. 5.25.
- d'Addio, Anna Cristina and d'Ercole, Marco Mira,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7, Sep. 2005
- Dex, S. and Scheibl, F., “Business Performance and Family-Friendly Policies”, Journal of General Management, Vol. 24(4), Summer 1999, pp. 22~37.
- Kiser, S. J., “Friendly to Whose Families? A Case Study of the Delivery of Work-Family Benefits in a Model Firm”,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draft of 22 November, mimeo, 1996
- Letablier, M. T., “Fertility and Family Policies in France”, Paris: Center d'Etudes de l'Emploi, 2003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 OECD, OECD Family Database 2011
- OECD, Closing the gender gap : Act now, 2012.12.17
- Sleebos, Joëlle E., “Low Fertility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5, Oct. 2003
- “In Sweden, Men Can Have It All”, NYT, 2010.6.9.

# 여성농업인의 역할변화와 정책 과제

강 혜 정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부교수

## 1. 서론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농가의 가족관계가 부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농업의 주종사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1970년 28%에서 2010년 53%로 지난 40년간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여성 경제활동인구에서 농가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4%로 나타났다. 남성 경제활동인구에서 농가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이며, 농림어업 GDP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임을 감안할 때, 농가여성 경제활동인구는 결코 적은 수라고 볼 수 없다<sup>1)</sup>.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과 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의 취업여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여성농업인<sup>2)</sup>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또한 농업 부문에서도 남성이 대부분 농가 경영주인 현실에서 여성농업인은 무급가족종사자로서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은 농업인으로서 더 나아가 직업인으로서 관심대상에서 소외되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과거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가정주부, 농업보조자라고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젊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역할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원예, 낙농 등의 생산과 친환경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전통식품 및 농산물 가공 등의 농외소득 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 CEO가 등장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은 농가경제 내에서 농업과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주체이며, 국가경제 전체로 볼 때는 농업에 종사하는 취

1) 201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 농촌에 거주하는 농가와 비농가의 전체 여성을 '농촌 여성'이라 하고, 농가에서 농업 또는 비농업에 종사하거나, 전업주부, 겸업 활동하는 여성을 '농가 여성'이라 하고, 이 중 만 15세 이상의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을 '여성농업인'으로 정의한다.

업자이다. 더 나아가 지역개발과 사회활동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그러나 노동가치 평가대 상에서 제외되어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은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왔다. 또한 가부장적 인 문화와 남성 중심의 제도적 틀 안에는 여성농업인 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제약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단순 노동집약적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는 낮고, 경제활동에 상응하는 지위 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는데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농가인구 고령화와 소비자 선호 변화 등의 농업·농 촌 여건 변화에 따라 향후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은 더 넓어지고, 그 역할 비중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농업의 핵심 인력으로 부상한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과 활동성과에 따라 향후 농업 경쟁력과 농촌 발 전은 크게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인력 확보차원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도 여성농업인 역할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 2. 여성농업인 실태 및 역할 변화<sup>3)</sup>

2008년 여성농업인의 60%가 60세 이상으로, 여성 농업인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 여성농업인의 26%가 농가 경영주로서의 역할을 책임지고 있으나, 이들 중 80% 이상이 남편의 사망 등으로 배우자가 없 는 고령 여성농업인이다.

여성농업인은 단순 노동집약적 농업노동에 주로 종

사하고 있으며, 일반 취업여성 보다 더 많은 노동시간 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여성농업 인의 약 44%가 농업노동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면서 핵심적인 농업노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번기에 여성농업인은 하루 평균 8시간 55분의 농업 노동을 하며 평균 2시간 24분 가사노동에 투입하고 있으며,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친 노동시간은 하 루 평균 11시간 19분에 달한다.

반면, 자산 소유정도 및 경영 의사결정 참여도가 배우자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 농가내 경영인으로 서의 지위 및 위상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농 업인 명의의 농지가 전혀 없는 농가는 전체의 78.7% 이며,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는 매우 낮은 수준 이다.

최근 40대, 50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외소득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여성농업인의 향후 농 외소득활동 참여 의사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농외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60.2%가 임 금근로자이며, 이 중 88%가 일용근로자 또는 임시근 로자로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40대, 50대 여성농업인 지역사회 활동 참여율 이 증가 추세로, 과거에 비해 여성농업인의 마을행사 및 봉사활동, 취약계층 돌봄사업, 지역개발사업, 도농 교류사업 등의 참여가 활발한 편이다.

이와 같이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고령화 시대의 대 안적 농업노동력, 소비자 수요와 선호 변화에 따른 농 산업 경영자, 변화하고 있는 농촌 지역사회의 새로운 리더로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즉, 과거 농업보조자 또는 농업취업자로서의 역할에서 현재는 농업주종사

3) 여성농업인의 실태 관련 자료는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통계에 근거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육성법 제8조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5년마다 여성농업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통계자료는 2008년 자료이다.

자로서, 농관련 사업가로서, 마을의 리더로서 그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를 농업 구조 변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 중심에서 조망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또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체계화시켜 나갈 것인가는 여성농업인 정책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정책 방향 수립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식품소비의 서구화에 따른 농업생산구조 변화가 일어나면서 양곡소비는 감소하고 육류 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종농업은 쇠퇴하는 반면, 축산, 과수, 채소 등의 시설원에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농가의 영농 형태도 소득 작목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논벼 농가의 비중은 감소하고, 채소와 과수농가는 증가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은 논벼보다는 주로 특용작물, 채소, 발작물 등의 영농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영농형태의 변화에 따라 향후 여성의 농업참여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이 종전 재화생산의 영역에서 재화생산 및 서비스 생산영역으로 분화되어감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한층 강조될 전망이다. 즉 재화생산영역에 있어서는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여가수요 증대 추세에 따라 농업의 문화 및 서비스 기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농업, 농촌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변화는 향후 농촌여성의 여성성에 더욱 더 의존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농산물이라는 재화생산영역에만 머무르던 과거의 농업은 생산성 향상에 의한 양적인 접근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성노동

력과 이를 대체하는 자본재를 중심으로 농업경영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고품질에 대한 요구와 농업의 서비스기능의 확대는 소비자에 대한 대면적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농업경영방식을 요구함으로써 경영체내 여성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농촌관광 및 마을개발사업에서 여성의 역할이 요구되고 도농교류 사업에서도 도시주부와 네트워킹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산물 가공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또한 웰빙 문화와 사이버마켓 시장의 확대에 여성농업인의 손맛과 전통을 재현한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전통식품과 향토음식 등의 농산물 가공식품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고, 이에 농산물 가공분야에서 여성농업인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농가인구 감소와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도우미와 후견인(멘토)으로서의 역할, 마을내 노인 간병 도우미로서의 역할, 보육교사로서의 역할, 학교급식에서의 역할 등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 3. 여성농업인의 활동 제약요인 및 정책 수요

여성농업인 설문조사 결과<sup>4)</sup>, 영농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이 겪는 애로사항 중 가장 큰 문제는 농사일과 가사일 이중의 힘든 육체노동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영농 및 농기계 기술 부족이 가장 큰

4) 여성농업인의 실태 관련 자료는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통계에 근거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육성법 제8조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5년마다 여성농업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통계자료는 2008년 자료이다.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생산자 조직 참여의 어려움과 영농활동의 고충을 상담할 곳이 없는 것도 여성농업인이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농외소득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가사일 또는 농사일과 병행하는 어려움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개발 및 상품개발을 위한 투자자금 부족, 상품 판매처 확보 문제, 마케팅 및 제품 홍보 부족 문제, 식품 위생 및 인증제도 등에 대한 법적 지식 부족 문제, 종업원 고용 및 관리 등이 제약 및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역시 가사일, 농사일과 지역사회활동을 병행하는 문제로 나타났다. 마을개발 사업 등의 전문지식과 정보수집 및 활용 능력 부족도 큰 제약요인이다. 또한 사회참여 경험과 리더십 부족도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활동이 활발한 중장년 여성농업인에게는 남녀차별과 같은 의식적인 문제보다는 일과 가사의 양립을 유지하는 문제와 각 활동 영역에서의 전문능력 부족 문제가 가장 큰 활동상 제약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여성농업인 정책 수요 조사 결과, 향후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1순위 과제로 39%가 '복지시설 및 복지 제도 확대' 라고 응답하였고, 28%가 '노동부담 경감', 10%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9%가 '농업관련 기술 및 자금지원', 8%가 '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 5%가 '전문경영교육 강화' 로 응답하였다.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복지제도 확대가 선정된 이유는 조사대상 여성의 60%가 60대 이상이라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연령대별 여성농업인 정책 수요 조사 결과, 40대 미만 여성농업인의 41%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이라고 응답하였다. 젊은 여성농업인의 농업인력화와 역할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40대, 50대 중장년 여성농업인의 31%는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 확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25%가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 경감이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농업노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농촌사회에서 활발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장년 여성농업인에게는 과중한 노동 부담으로 인한 여가생활의 부족과 건강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 더불어 활동하기 편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60대 이상 여성농업인의 44%가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 확충을 제1순위 정책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은 31%가 노동부담 경감으로 응답하였다. 고령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4. 여성농업인의 역할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 방향도 새롭게 변해야 한다. 농가인구 고령화와 소비자 선호 변화 등의 농업·농촌 여건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활동 영역은 더 넓어지고, 역할과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여성농업인이 단순히 복지대상자로 간주하였던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생애주기별, 성장단계별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의 활동실태와 정책수요는 여성농업인의 연령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별 정책 추진 방향은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정책과 지원을 수립하는 것이다. 젊은 여성농업인은 후계 인력육성 대상으로, 중장년 여성농업인은 전문 인력화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원하는 고령여성농업인은 생산자원화 대상으로, 초고령 농업인은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분류하여 각 주기에 필요한 정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의 성장단계별 정책 추진 방향은 영농의 진입, 성장, 은퇴단계에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수립하는 것이다. 진입단계에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해서는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 대책, 성장단계에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해서는 전문 농업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책, 은퇴단계에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해서는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대책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성장단계는 생애주기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젊은 여성농업인은 주로 진입 단계에 있으며, 중장년 여성농업인들은 주로 성장단계에 있고, 고령 여성농업인들은 주로 은퇴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성장단계별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젊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촌형 보육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농촌지역 특성상 지역에 따라 아동 분산, 이동거리로 인한 보육시설 접근성 제한, 농번기와 농한기로 인한 보육시설 수요의 계절성, 부정기적인 소득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의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농촌 상황을 고려할 때, 시설 및 인력

의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센터로 활용 가능한 시설은 여성농업인센터<sup>5)</sup>이다. 농촌형 보육 및 교육시설은 접근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마을내 위치한 여성농업인센터는 타 보육시설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부터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대부분의 여성농업인센터가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보육 및 방과 후 교실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여성농업인센터가 농촌형 보육시설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 보육교사 양성 등 여성농업인센터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근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없는 지역의 소수 아동들을 위해 가정 등 일정한 장소에서 보육하는 가정보육도우미제도 시행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가 반영된 농촌형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농업인은 자녀 양육 등의 가사시간을 확보하고 시간 및 공간적 제약을 덜 받는 재택근무(home-based work) 또는 파트타임 형태의 겸업 확대를 선호하며, 취학 자녀수가 많을수록 여성농업인은 보수가 많은 전일제 형태의 겸업을 더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농촌형 일자리 마련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영농활동이 활발한 여성 전업농에게 공동경영주로서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상당수의 중장년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 측면에서 농업 주종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업 경영 의사결정 참여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이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주로서

5)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영유아보육, 방과 후 학습지도, 농한기 문화활동 교양강좌, 도농교류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젊은 여성 농업인의 농촌정착 도모를 위해 설립되었다.



일하고 있으나, 의사결정권, 재산권 및 대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며, 농가 경영주 중심의 정부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다. 공동경영주 지위 인정은 여성농업인의 자아성취감 고취와 농업경영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여 농업경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독일,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도 여성농업인에게 공동경영주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sup>6)</sup>. 또한 여성 명의 재산이 많을수록, 농업관련 활동이 많을수록 여성 전업농의 의사결정 참여도는 높아진다는 연구결과<sup>7)</sup>에 근거하여, 여성 전업농의 농업경영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여성 전업농 명의의 재산 소유 비중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으로 농가경영주와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원 간에 농업경영에 따른 역할과 의무, 재산, 보수 등을 문서로 명확히 하는 '농가경영협약<sup>8)</sup>' 제도의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 전업농에게 의사결정권, 재산권을 분배한 농가에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sup>9)</sup>.

넷째,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종사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 및 지원이 필요하다.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 대부분이 일용 및 임시근로자로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낮은 종사상 지위는 낮은 농외소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농외소득활동에 있어서도 지위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 교육 및 관련 제도 지원이 뒷받침 되

어야 할 것이다. 즉, 여성농업인의 농외취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여성농업인의 개인 창업 또는 영농조합법인 결성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창업농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창업농 지원제도는 여성농업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종합적인 창업지원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창업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일본의 여성농업인 창업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 방안으로 중요한 정책은 교육이다. 강혜정(2011) 연구에 의하면 농업교육 참여 횟수와 단체활동 수가 많을수록 의사결정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 전업농을 위한 전문 농업교육이 부족한 현실에서, 여성 전업농 대상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은 생활, 의식, 식생활 교육이 중심이었으나, 영농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도 전문 인력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영농활동이 가장 활발한 40, 50대 중장년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기술, 농산물 가공기술, 농산물 유통, 마케팅 기술, 컴퓨터 교육 등 실질적 활동에 필요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전문 여성농업인 육성 방안의 선결과제로

6) 프랑스의 경우, 1980년 농업법에서 농지소유와 무관하게 한쪽의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동의나 서명 없이도 농장의 경영에 관한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하여 여성농업인의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 경영인으로 인정하는 실질 공동경영주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박민선, 2000).

7) 강혜정(2011)의 분석결과 참조

8) 농가경영협약은 부부 및 자녀세대 등 가족구성원이 농업경영을 계획·수립함에 있어 역할분담, 근로조건, 장래경영이양계획 등에 관해 문서로 협약을 맺음으로써 농업경영 참여에 따른 성취감을 높이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가정의 권위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방식이 농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농업기반을 취약하게 함에 따라 농가의 경영을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으로 전환하고 가족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원을 보호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농가 가족경영협약은 이미 프랑스에선 공동경영인제도, 일본에선 가족경영협정제도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고 경영주와 함께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배우자 및 후계자에 대해서는 인정농업인제도, 농업인 연금제도, 정책 자금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도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김경미, 2004; 강혜정·마상진, 2007).

9) 정책대상 선정시 부부합의에 의한 농가경영협약 농가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 후계농 및 창업농 우선 선발, 정책자금 지원시 가점 부여 등이다. 일본의 인정농업자 제도는 실질적으로 공동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 가족경영협정 체결 등을 요건으로 부부 등에 의한 인정농업인 공동신청을 허가하고 있어 여성농업인 및 농업 후계자도 경영주와 함께 인정농업인이 될 수 있다(강혜정·마상진, 2007).

여성농업인의 가사일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출산, 고령, 사고 등에 한정되어 있는 도우미 제도를 가사, 육아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우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의 유휴인력 또는 지역내 활동 가능한 여성농업인을 파악하여 농가도우미 인력으로 양성하고 알선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가사노동 경감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마을공동급식소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여성용 농기계 임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여성용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확산은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농업노동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이용도를 높이는 것은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밭농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여성용 농기계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서 여성용 농기계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구매하고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여 여성용 농기계를 필요한 여성농업인이 필요한 때에만 저렴하고 편리하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용 농기계 임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임대용 농기계에 대한 구입지도와 A/S강화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생계보장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의 연금수급권 확대 및 저소득계층 여성농업인의 생계지원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활동을 원하는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촌형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혜정 · 마상진. 2007. 「여성농업인의 역할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강혜정. 2011. "여성농업인의 농업 및 농외소득활동에 관한 연구", 2011년 여성단체 연대 대토론회 자료집.
- 강혜정. 2008.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수산식품부.